

1. 기후위기 극복, 그린서울

- 태양광, 소규모풍력발전,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자립도시 실현
- 공공버스를 시작으로 2030 무상녹색 대중교통 실현
- 도로줄이기로 도시횡단 공원조성, 걷는 도시 자전거 도시로 전환
- 2030 내연기관차 서울 진입금지, 서울시 진입 혼잡통행료 징수

2. 부동산 투기해체, 세입자 도시 서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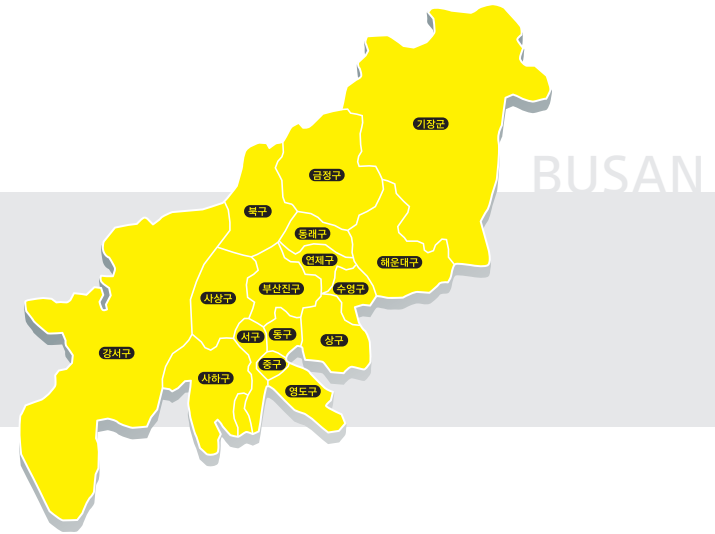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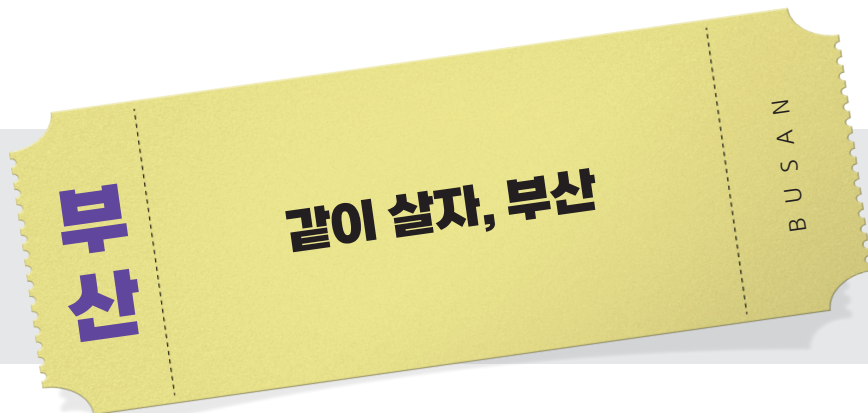
- 신규택지 100% 공공개발, 민간개발이익환수 공공주택기금조성
- 전월세값 폭등 지속시 5년간 임대료 긴급 동결 추진
- 재산세 탄력세율 50% 즉시 인상, 주거 취약층 주거보조비 지급
- 주택경매 5년간 공공선매수, 100%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급

3. 신노동법 표준도시 서울

- 플랫폼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특별감독기관 설립 및 지원강화
- 5인 미만 사업장 차별금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감독 강화
- 도심제조업 강화 및 사회서비스영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

4. 차별 없는 평등도시 서울

-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기업까지 임금격차 공시 확대
- 쿼터퍼레이드 서울시 공식 후원
- 서울형 젠더폭력 신고센터 운영
- 젠더정책국, 서울젠더안전진흥원 신설



1. 공공성 보장 모범도시, 돌봄 걱정 없는 부산

- 동부산의료원 설립 및 민간병원 매입
 - 100~200병상 규모의 민간병원을 부산시가 매입해서 공공의료 강화
- 부산사회서비스원 즉각 설립
 - 돌봄서비스 수준 및 돌봄노동자 환경개선을 위한 평가와 실태조사 사업 진행
- 부산지역의료공제보험 실시

2. 사람에게 투자하는 부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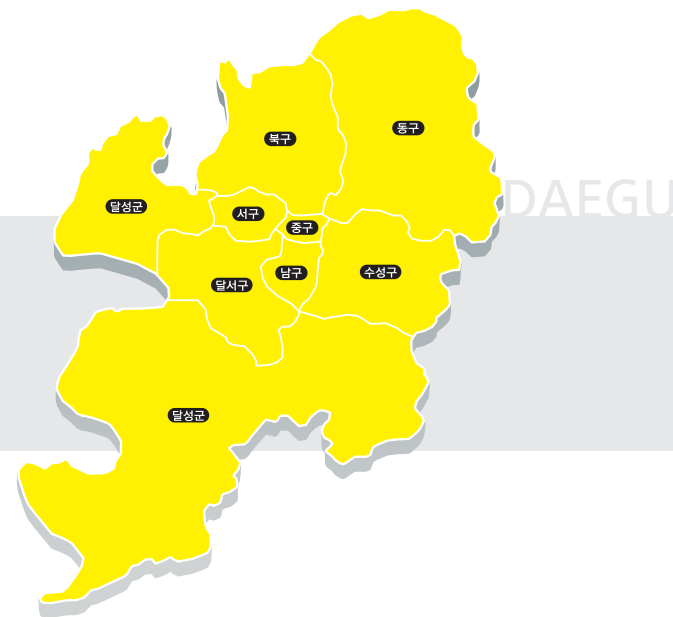
- 부산거점대학 학생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투자
 - 서울대 수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투자해서 인재 양성
- 첨단소프트웨어 전문교육센터설립
 - 첨단SW전문교육센터로 확대 운영 및 ICT중심의 첨단기술 교육 기회 제공
- 부산시 사립대학 재교육특화기관으로 전환
 - 부산지역 폐교 위기에 내몰린 사립대학교를 재정투자를 통해 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전환

3.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평등, 연대의 도시 부산

-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
 - 탈탄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작용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소득과 재교육, 일자리까지 책임
- 대중교통중심으로 교통체계전환
 - 버스노선을 지하철과 연계 강화, 마을버스 공영제, 대중교통할인권 도입
-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
 - 청사표 해상풍력개발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로 개발
-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철회

4. 소멸하지 않는 도시 부산

- 지역재투자법 제정
 - 부산지역 기업 법인을 부산으로 이전 추진
- 지역인재채용할당 50% 상향
 - 부산소재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역인재채용 할당 상향



1. 친환경 미래산업으로 정의로운 전환

- ‘정의로운 전환기금’ 통한 교육·소득·전환 지원
- 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특별지역’으로 지정
- 탈탄소 자동차 부품기술 분야 투자
- 녹색교통과 녹색운송 기술 및 서비스 연구 지원

2. ‘주4일제 전환’ 지원으로 청년이 일할 맛 나는 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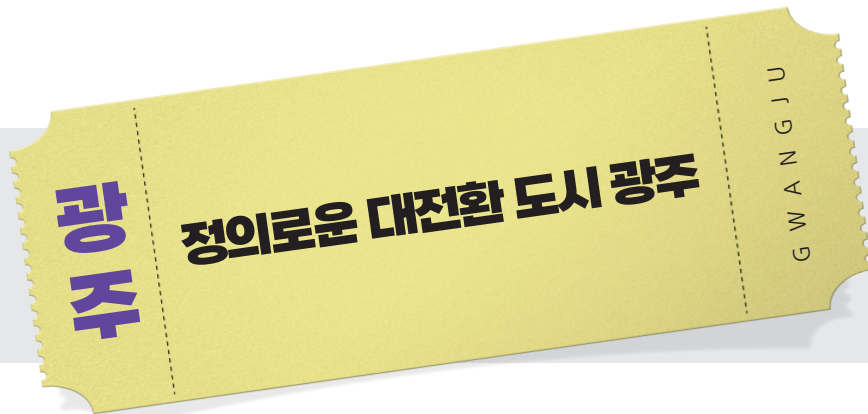
- 중소 벤처기업 ‘주4일제 전환’ 지원
- 공공기관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비율 50%로 상향
- 보증금 제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
-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 기초자산 지급

3. 감염병 대응 UP, 공공의료 UP

- 위드코로나 종합플랜 마련
-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정 기준 마련
- 제2대구의료원 조속한 설립 및 지방의료원 강화
- 영남권 국가심장수술센터 설립 및 감염병전문병원 신속 개원

4. 맑은 물, 맑은 공기, 푸른 숲이 가득한 녹색 대구

- 낙동강 및 금호강, 신천 등 지역하천 재자연화
- 대중교통 연계되는 대구형 공유자전거 도입
- 폭염을 완화 할 녹색 도심공원 확충
- 자전거 전용도로 및 우선도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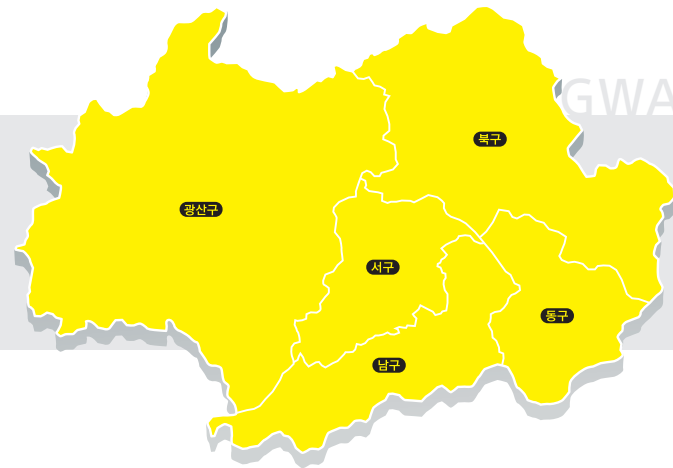


1. 내일이 있는 녹색 전환 도시 광주

- 광주형 자동차 공장을 최첨단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
- 재생에너지 확대, 에너지 자립 및 관련 일자리 창출
- 정부 탄소중립 도시 지정 추진
- 친환경 무상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 등) 지원
- RE100 산업단지 조성
- 생태농업 면적 확대 지원

2. 돌봄과 상생의 광주

- ‘노동조합, 중소기업, 사회적경제조직, 노동자소유기업, 농민’ 역량 강화 지원
- 자치구별 통합돌봄거점센터 설립
- 노동자 경영 참여, 노사민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
- 상생과 돌봄 경제로 일자리 1만 개 창출 지원
- 광주형 일자리보장제로 일자리 10만개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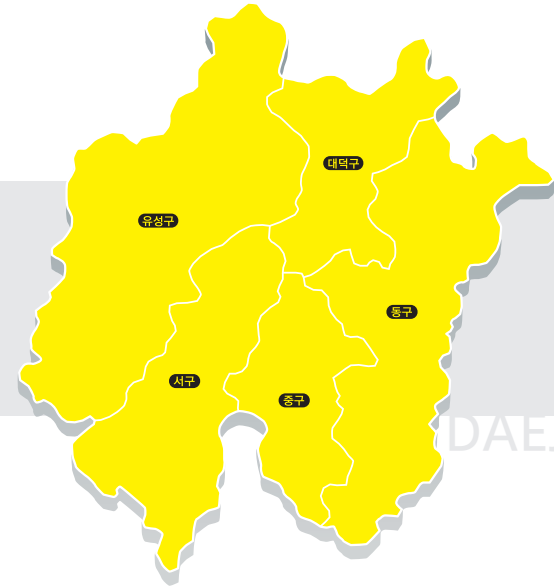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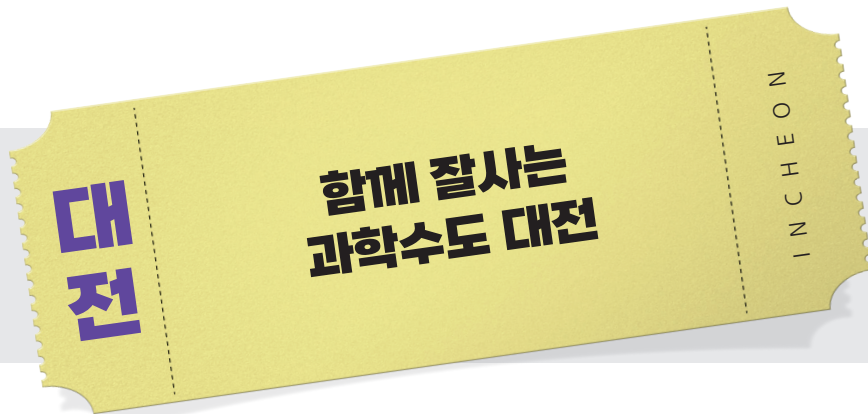


3. 시민의 생명과 안전 우선 도시 광주

- 사회적 참사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체험관 설립
-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설립 및 인력 확충 지원
-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적극 지원으로 공공의료 확대
- 의료, 의과학 분야 인재 육성 위한 R&D 투자 적극 지원
- 의료, 의과학, 바이오 기업 유치로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 구축

4. 민주주의 특별시 광주

- 국제 인권교류 복합공간 ‘아시아 민주인권공원’ 조성
-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국가트라우마센터를 국가폭력 치유센터로 확대조성
- 아시아 광주진료소 확대
- 미래세대 교육기관 ‘아시아 미래 민주주의센터’ 건립
- ‘국립 민주주의 연구소’ 설치



1. 과학수도 대전

- 대덕연구단지를 녹색혁신연구단지로 전환!
-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중심도시로 과학도시 정체성 제고
- 녹색혁신기술 국가 신규 R&D 확대
- 태양광 패널, 풍력발전기 터빈, 차세대 배터리, 에너지 저장장치, 탈-탄소 소재 개발 등 혁신 기술 중점 연구단지로 전환
- 그린벤처 육성지원, 신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

2. 생태도시 대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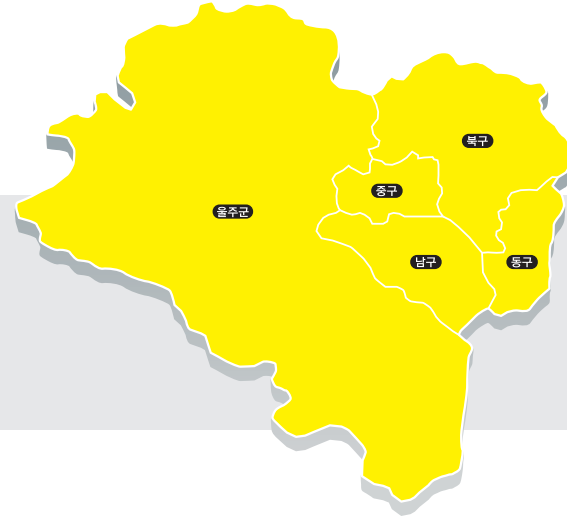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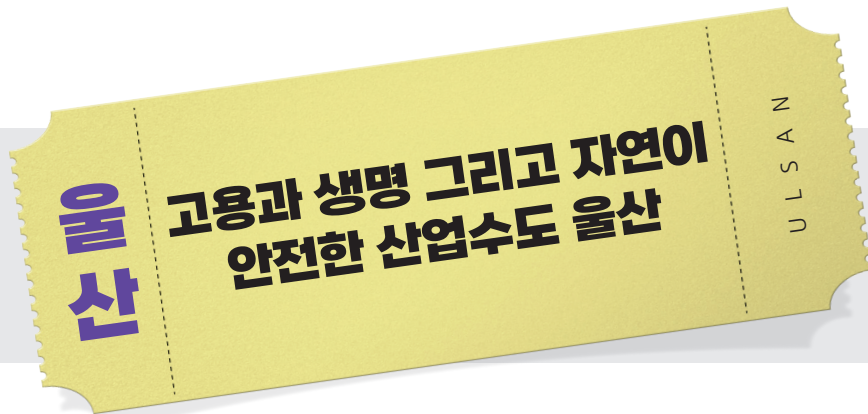
- 전국 유일 도심 습지인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
- 보문산 개발이 아닌 생태자연화
- 친환경 에너지로 대전 에너지 자립도 제고
- 화석연료 사용 증가시키는 발전용량 증설 금지

3. 함께 잘 사는 대전

-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혁신도시 완성,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
- 대전 도시 균형 발전 지원, 원도심에 질 좋은 청년 주거 공공주택 공급
-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강화
- 공공주택위원회 설치로 주택 거버넌스
-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

4. 안전하고 건강한 대전

-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중단, 탈핵 연구 적극 지원
- 대전 핵폐기물 문제 해결! 원자력 안전감시기구 역할 강화
- 공공의료 확대, 대전의료원·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 지원
- 여성 1인가구 안전 도시 구현



1. 산업전환기 노동자 해고금지 및 일자리, 안전 보장

- 4차 산업전환, 탈탄소 전환을 빌미로 한 기업의 임의적인 해고 금지
- ‘정의로운전환’으로 탄소산업일자리와 탈탄소녹색일자리가 최대한 1:1로 전환되도록 ‘국가일자리보장제’ 추진
-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

2. ‘신노동 특구’, ‘주4일제’ 시범도시 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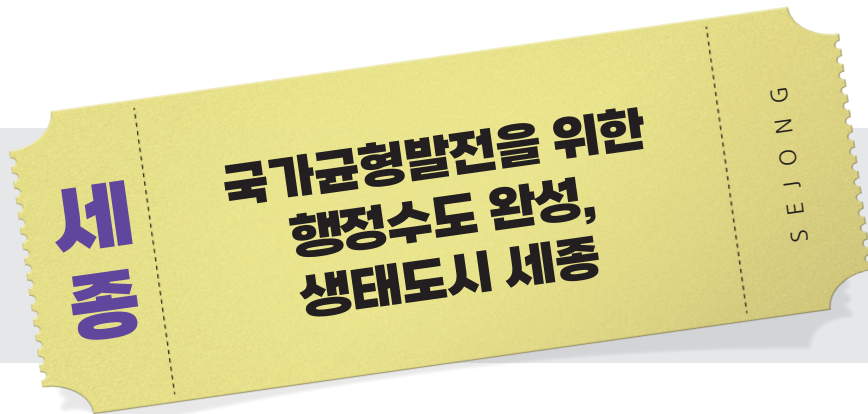
- 5인 미만 사업장, 비정규직, 일용직, 플랫폼, 특수고용 노동자, 영세자영업자, 소상공인 등 「근로기준법」 밖의 노동자를 위한 ‘신노동법’ 시범 적용
 - ‘일할 권리’, ‘쉼 권리’, ‘단결할 권리’ 보장
- 원청과 하청이 함께 ‘주4일제’를 시행하는 ‘주4일제 시범도시’ 실현

3. 탈핵!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 반대! 녹색에너지 집중!

- 노후 핵발전소(월성 2,3,4호기) 조기폐쇄, 신규 원전 건설 금지 등 중단 없는 탈핵 추진
-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 건설 백지화 추진
- 해상풍력단지 등 재생에너지 집중 투자

4. 대중교통 녹색혁신 추진

- 울산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
- 모든 버스차량 전기차로 전환
-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
- 수도권 수준의 공원 및 산책로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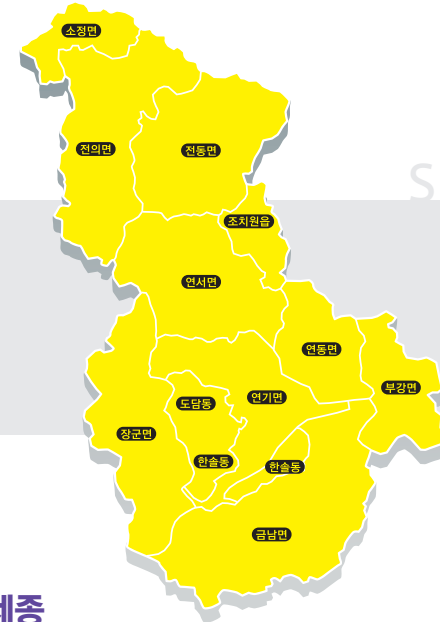


1. 생태도시 세종

-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, 민관협력 햇빛발전소 설립
- 자전거도로 전면화(동지역 → 읍면지역으로 확대)
- 전동면 소각장 건설 백지화, 리사이클 센터 설립, 폐기물 배출 최소화 정책 도입
- 도시 생태축 구축(금강~호수공원~수목원~전월산~미호천)
- 세종보 철거, 금강변 생태친수구역 조성
- 라돈 등 생활 속 유해물질 저감센터 운영

2. 지방분권 선도도시, 행정수도 세종

-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,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, 미이전 중앙 행정기관 이전,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
- 대전-세종-충북 광역철도의 조기 구축
- 지방분권 혁신도시(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, 주민자치회 전면화)
- 읍면동 돌봄커뮤니티 센터, 참여소득 도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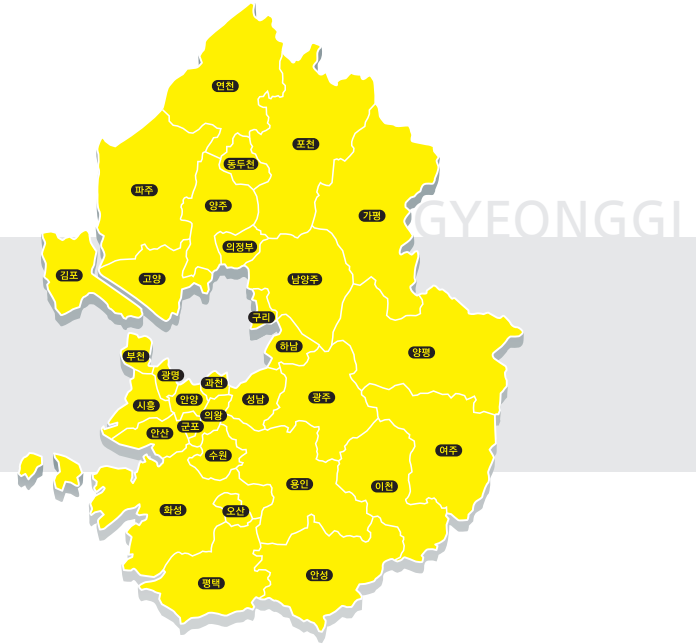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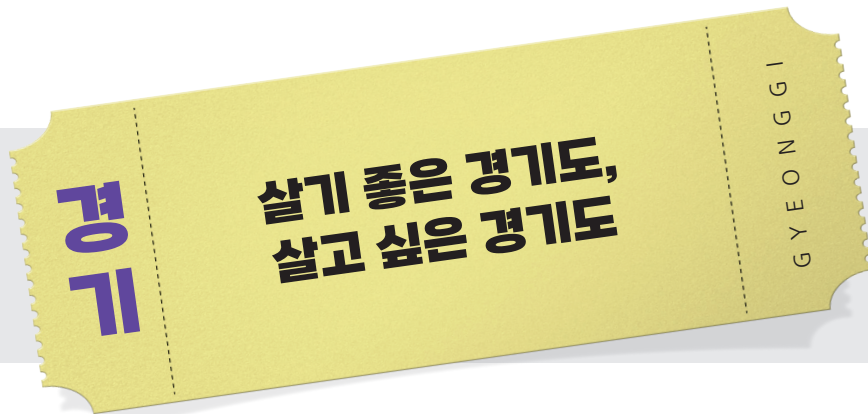
SEJONG

3. 인권특별시 세종

- 세종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, 민간으로 점진적 확대
- 세종 국회의사당내 청소년의회 설치
- 모든 건축물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, 24시간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보장
- 문화다양성센터 설립으로 문화다양성협약 이행

4. 공정경제도시 세종

- 농지법 위반 사례 전수조사 및 대응 조치
- 전동면 벤처밸리산업단지 일방추진 중단
- 도람마을 임대료 인상 철회 및 주거복지서비스 개선
-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입주인 주거권 보장
- BRT 주변지역 상가 활용방안 제고를 위한 규제철폐



1. 보육·복지 질 향상

-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경기도 시범 실시
- 보육·교육 노동자 처우 개선과 전문성을 제고,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육·교육의 질 향상
-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를 통합, '24시간 수도권 장애인 통합 콜택시' 운영, 장애인 이동권 보장

2. 주거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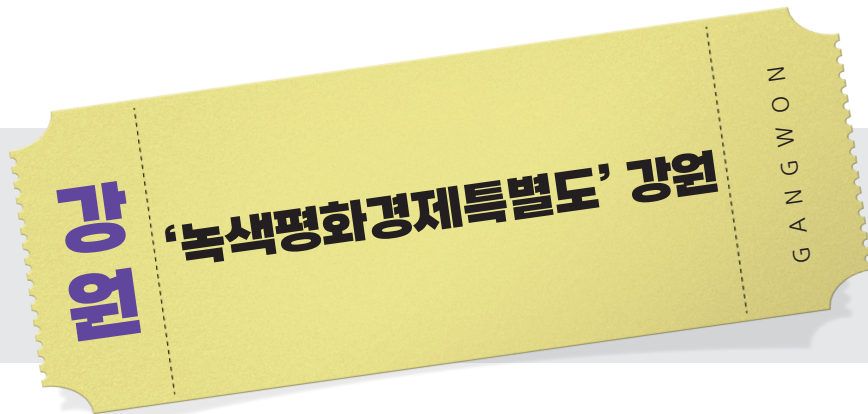
- 김포공항 이전, 공공주택단지 보급
-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서민 주거 안정 도모

3. 경기도 균형발전

- 광역철도망 예산 확충 등을 통한 접근성 문제와 지역 간 교통 불균형 해소
- 도내 광역 버스 등 2층 전기버스 확대 및 점진적 대체, 배차 간격 단축
- 경기 북부, 동부 등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개선하고 지원 확대

4. 기후위기 대응

-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경기도부터 도내 대기업 등 대규모 탄소배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세 부과
- 도내 전기버스 공급 확대 및 점진적 대체로 대중교통 탄소중립 달성
- 서해 수상 및 염해 간척지 풍력/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, 도내 RE100 산단 조성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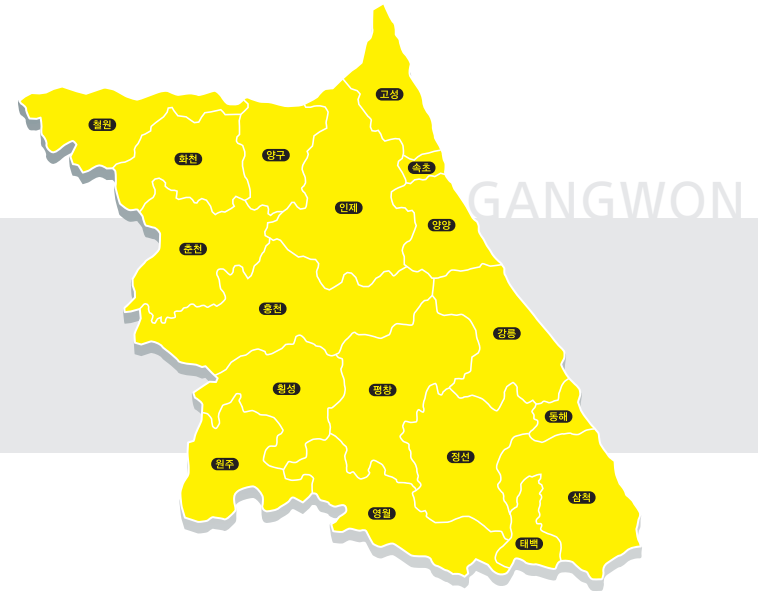


1. 강원도 녹색평화경제 실현

- '글로벌 녹색치유지구 육성'
 - 교통접근성 높이고 정부주도 녹색치유관광타운 조성
- 기후위기 공동 대응으로 남북 신뢰 구축
 - 남북산림협약, 남북 생태영농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
- '유럽행 고속열차 기점'으로 녹색평화경제 실현
 - 남북 신뢰관계 구축으로 유럽행 고속열차의 기점 마련

2.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특구 지정

- '탄소중립특구' 지정
 - 강릉·삼척 석탄화력발전 조기폐쇄, 송전탑 건설 백지화
 -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녹색가치 보전
- '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' 설립
 - 에너지전환 연구 및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 지원
- 공적 희생에는 확실한 공적 보상 보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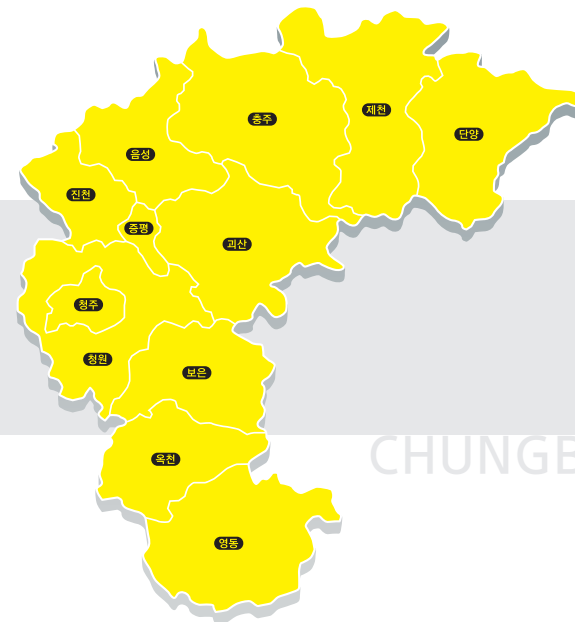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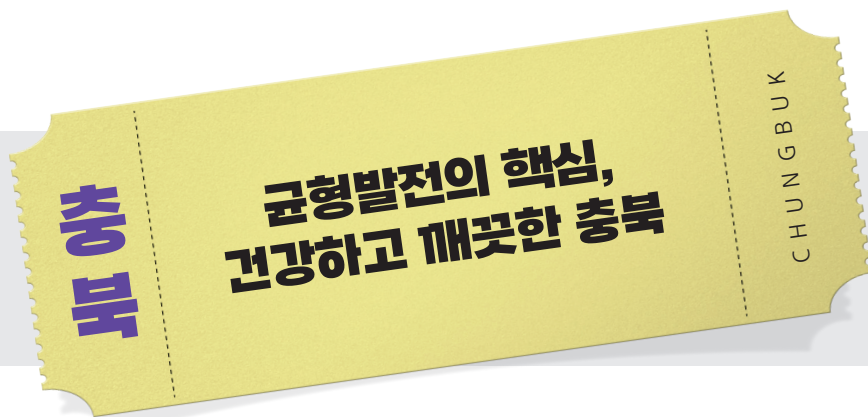


3. '전국민 주4일제'로 '강원도 관광객 2억 명' 시대 달성

- 휴가철 관광을 넘어 사시사철 관광지로
 -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쉼 권리 보장
 - 주4일제로 늘어난 휴식을 강원도의 녹색 품속에서 힐링
- 신노동법으로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
 - 강력한 노동권 보장으로 관광업 종사 비정규직 보호
 - 평등수당 도입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정 유도

4. '농어민 기본소득'으로 농가소득 보장

- 기후위기로 더 어려워진 농어민 삶 국가가 보장
 -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
 -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
- 전국민 먹거리기본법 제정, 친환경 지역농축수산물 순환
 - 공공시설에 지역 농축수산물 유통순환 체계 구축제정



1. 정의로운 충북 개발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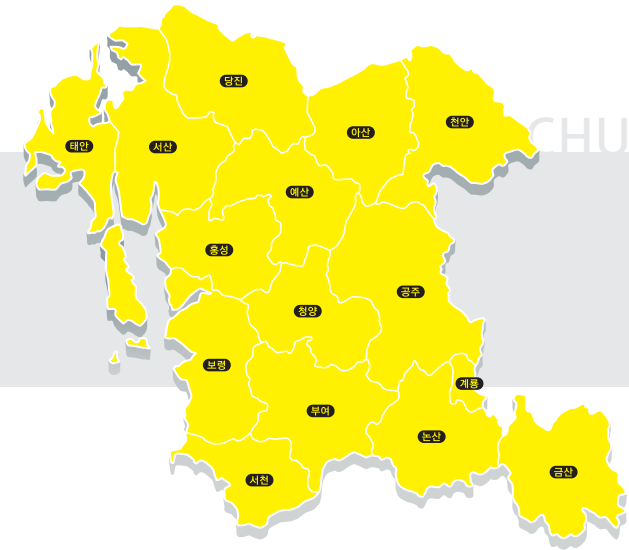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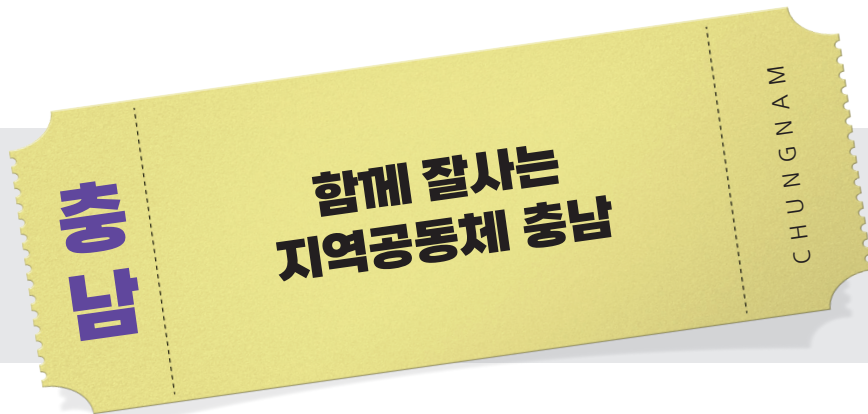
- 재개발·재건축 사업 개발이익 50% 환수, 재건축 허용연한 50년
 - 조합 설립 동의 요건 4/5로 강화
-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, 8시간 노동 보장
 - 직접시공제 공공공사 전체 확대, 최소 75% 직접시공 의무화
- 산업단지 공공개발
 - 신규 산업단지 개발 요건 강화 : 민간 주도 개발 불가, 환경 및 상권영향평가 실시
 - 난립 공장지대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

2. 집 걱정 없는 충북

- 분양원가 공개, 분양가 상한제 확대
 - 선분양제 민간 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1개 세부항목 공개
 - 분양가 상한제를 선분양제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시행
- 후분양제 의무화
 - 공공아파트 80% 완공 후 분양 의무화
 - 후분양제 도입 민간아파트 금융·세제 지원 확대

3. 에너지 자립 충북

- 정부 및 지자체 청사 신축·재건축 시 에너지 자립률 2등급(80~100%) 이상 의무화
 - 정부 및 지자체 청사 건축계획시 에너지 자립률 2등급을 최저 기준으로
 - 현행 인증제도의 60% 미만(에너지자립률 4~5등급)은 정부의 에너지 자립 건물에 미포함
 - 청주시 신청사, 도청 2청사 및 도의회 청사에 즉시 적용
- 석탄·LNG 화력발전소 허가 전면 재검토, 신규 화력발전 중단
 - 2030년까지 석탄·LNG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
 - 기존 허가된 화력발전소는 2030 온실가스 50% 절감안에 맞추어 전면 재검토
 - 신규 화력발전 계획 취소
- 시멘트 유연탄 대체 정책 폐기
 - 소성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기준과 동일 수준으로 적용
 - 전국 시멘트 공장에 대한 즉각적인 환경영향평가 실시



1. 탄소중립으로 기후정의 실현시키는 충남

- 노후한 보령화력발전소 4, 5, 6호기 조기 폐쇄
- 화력발전세(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) 인상
-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다(多)소비형 산업구조 개편
- 공정한 산업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
- 서산민항 건설 추진 중단
- 당진 현대제철 수소환원제철 실현
-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

2. 주4일제 전환, 공공의료 강화로 건강한 충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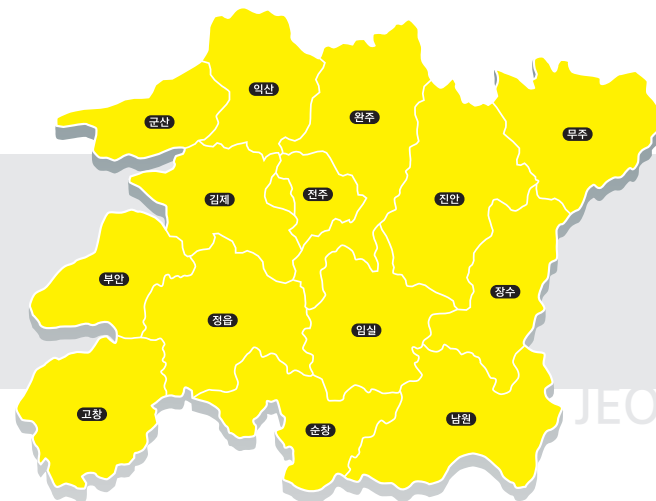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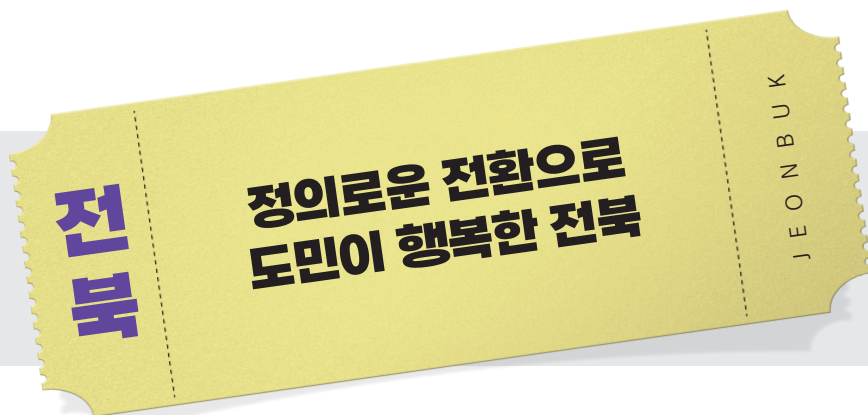
- 신노동법 도입으로 주4일제 전환, 공공의료 강화로 감염병 극복
-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및 처우개선
-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 설립
- 공공의료 기관 및 인력확충

3. 농민기본소득 실현으로 농민이 행복한 충남

- 기후위기 시대 식량자급자족 실현
-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
- 과세 방식과 농지총량제를 통해 농지 재조정
- GMO(유전자조작농산물) 완전표시제 실시, 친환경 농업 육성
- '공동경작 마을공동체', 자체생산농산물 가공 마을기업 육성 등 추진
- 여성·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법 제정

4. 여성·청년·장애인 인권 존중받고 지방분권 실현하는 충남

-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구제기구, 전담부서 등 강화
- 전국민육아휴직제 도입 / 유연근무제도 확대
-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
- 지역 부가가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선순환경제 추진
- 노동자, 청년 정주여건 개선 및 본사 이전 추진
- 자치조직권 확대, 자치입법권 강화



1. 전라북도를 공공의료복지의 중심으로

- 공공의대 설립, 전북대병원 감염병 대응센터 기능 강화
- 추진 중인 군산 전북대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
- 지역별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
- 공공어린이재활센터 병원급으로 건립
- 1인/청년/대학생/독거노인 가구 맞춤형 주거 지원
- 지자체 공급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

2. 전라북도를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중심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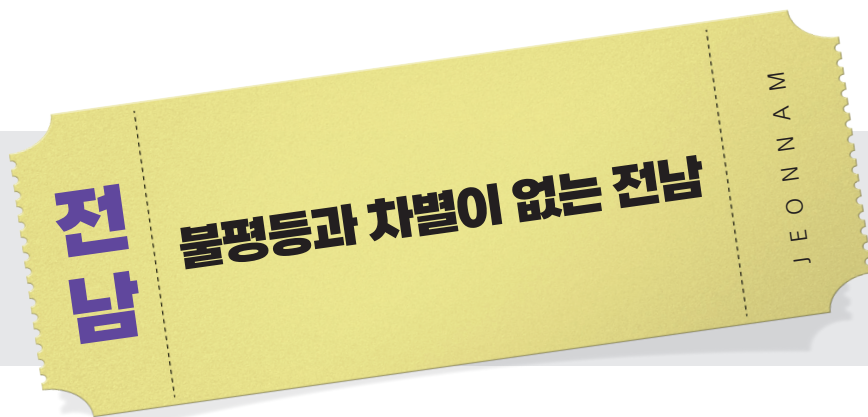
- 전북 상용차 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위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시스템 구축
- 미래 상용차 산업 발전 전략 마련
- 전북 상용차지원센터, 상용자동차기술연구소 신설
- 상용차 관련 업체 총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 지원

3.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해양 생태관광 중심지로

- 새만금 해수 유통 즉시 추진
- 생태적 가치와 갯벌 복원
- 새만금 국제 해양·생태관광지 조성
- 새만금 양식단지 조성 및 수산업 복원
-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

4. 전라북도를 농민이 행복한 지역으로

-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
- 친환경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협동조합 적극 지원
-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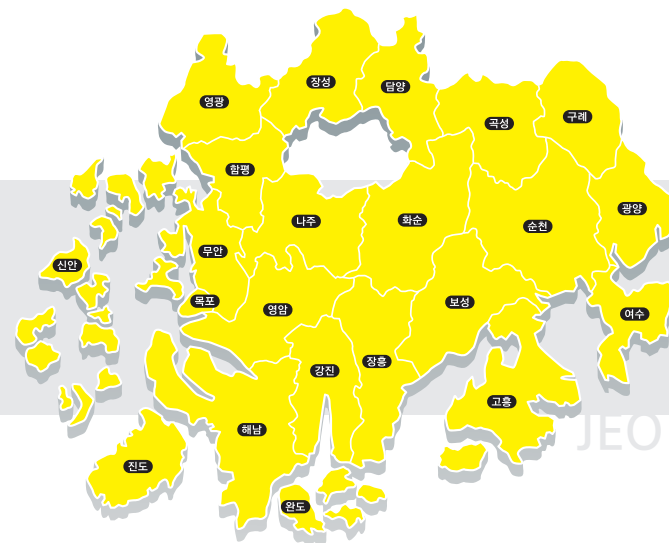


1. 에너지전환, 녹색교통 등으로 기후위기 대응

-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(에너지 자립마을, 마을햇빛발전소 등)
- 공공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에너지 절약형 주택 확대
- 전남에너지공사 및 전남기후위기대응센터 건립
- 대중교통 및 농업용 트럭 전기차로 대체 지원
- 여수산단을 그린뉴딜산단으로 전환
- 대불산단을 재생에너지 배후기지로

2. 불평등한 농어민의 삶 대전환

- 모든 농어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
- 농지는 농민에게(부채지주 및 부동산 투기 농지 전면 환수해 소농과 청년농에게 / 농업진흥구역 확대, 농지보유 총량제 도입)
- 전남형 먹거리 체계 구축(지역별 공공급식센터 설치 / 생애주기별 급식체계 제도화)
- 농어민이 안전한 전남(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)
- 기후재난 피해 농어민 보상체계 확립(농어업재해 보상을 8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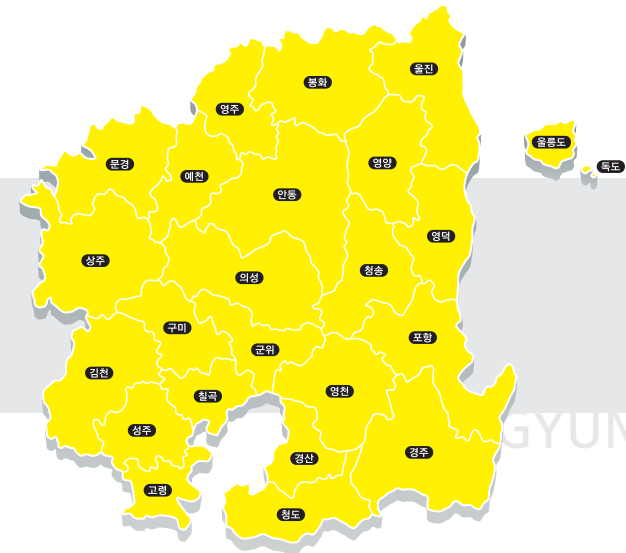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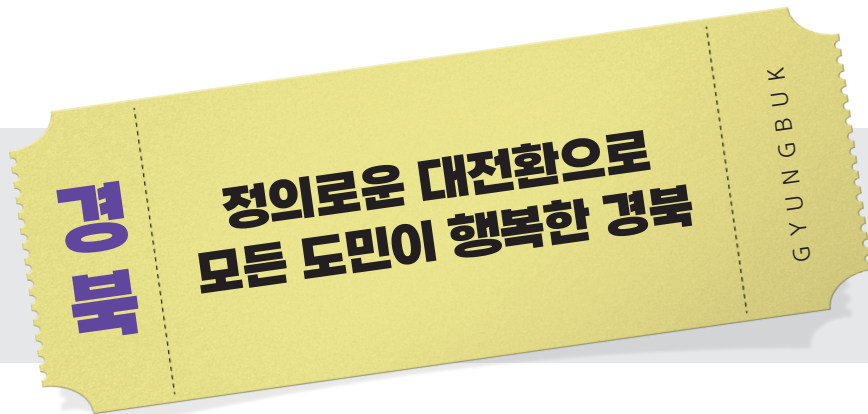


3. 차별없고 안전한 일자리와 노동

- 플랫폼 노동자(배달라이더 포함) 쉼터 및 노동자 상해보험 도입
- 공공형 일자리 기회보장, 생활임금제도 확대 및 현실화
- 직장 갑질(괴롭힘·성비위등) 근절
- 안전재해, 중대재해 다발사업체 공공부문 입찰제한
- 녹색병원(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전문병원)
- 노동법 교육 의무화

4. 골목까지 따뜻한 복지 전남

- 전남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
- 전남 동부권 닥터헬기 도입 및 공공형 심리치유센터 설립
- 성평등 및 장애평등 친화도시 확대
- 내집앞 돌봄시스템 구축 / 마을회관에 통합(사회적) 돌봄센터 설치
- 청년 기본소득 도입 및 청년 4대보험금 지원(일정액)
-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권리형 일자리
-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및 탈시설 지원



1.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

- 산·학·연·관·노 협력으로 미래차 부품육성
- 기초지자체 및 권역별 미래차 부품육성 협의기구 및 전담기구 신설
- 에너지전환으로 발생하는 실업 및 고용위기에 대응
-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·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지원
-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

2.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에너지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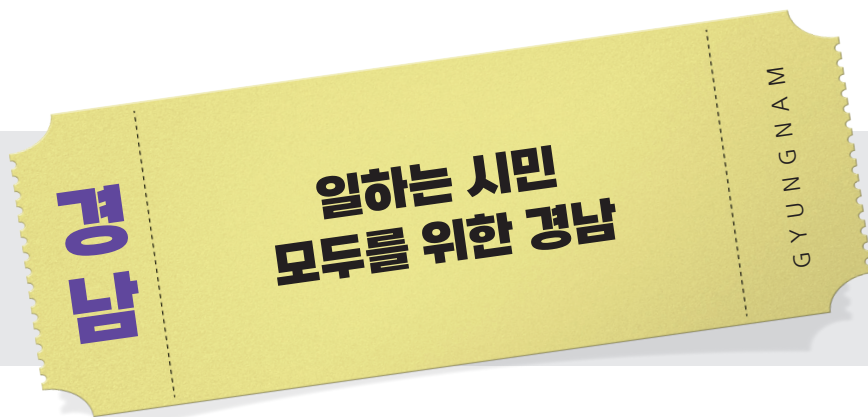
- 경북에너지공사 설립
- 동해안 공공해양풍력발전단지 조성
- 월성 원전의 단계적 폐지 및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 건설 저지

3. 공공의료 및 공공교육 강화

- 남부권 지방의료원 신설 국비지원
- 어린이 무상의료 단계적 실시
- 사립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영형 사립 대학으로 전환

4. 청년수당 및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

- 미취업 청년 및 신규 청년농어민 재정 지원
- 농어업의 사회적 공공성과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하여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



1. 지역균형발전 실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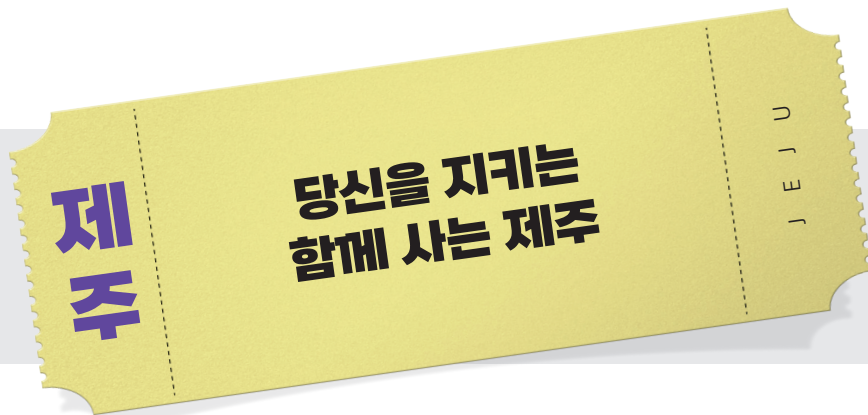
- 100개 Divercity, 2,000개 마을커뮤니티 조성
- 원도심 도시 재생방식의 공공기관 이전

2. 녹색산업 대전환으로 경남의 미래 창출

-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존경제 특구 지정
 - 2차전지, 에너지저장장치 등 녹색산업 육성
- 정의로운 전환으로 고용불안 해소
 - 탈탄소산업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고용문제 해결
- 산학연기술연구소 설립
 - 부품소재 및 중소기업 발전전략 수립, 미래 녹색산업 육성

3. 신노동법 제정으로 노동이 당연한 경남 확립

-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 폐기
- 신노동 3권 확립
 -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'일할 권리', '여가의 권리', '단결할 권리' 확립
- 노동이 당연한 경남 건설
 - 일 못 나는 일자리, 여가가 있는 일자리, 노조가 있는 일자리 확립으로 노동이 당연한 경남 건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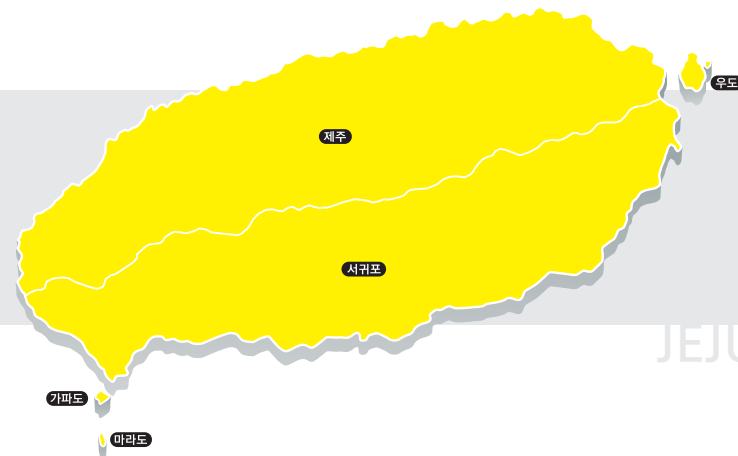


1. 제주를 ‘대한민국 환경수도’로 지정

- 환경수도 지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, 관련 조례 정비
 - 이를 총괄 할 수 있는 기후 부지사, 녹색환경 의회 설치
-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, 현 공항을 확충
- 비자림로 확대,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난개발 중단
 - 환경영향평가제 강화, 녹색입도세(환경보전기여금) 도입
- 생태농어업 지원, 친환경농가를 1만 가구 이상 확대

2. 민생경제 활성화

- 무상버스 도입 및 버스공영제 실현
 - 학생, 어르신부터 순차적 무상버스 시행, 교통복지 확대
 - 현재 버스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버스 공기업 설립
- 책임돌봄으로 사회 일자리 창출
 - 마을별 아동, 노인, 장애인 돌봄을 전담 할 수 있는 인력 최소 1500명 이상 공공일자리 마련
- 공공의료 확대
 - 섬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



3.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, 국제자유도시 폐기

- 자치입법권, 자치재정권, 자치조직권 확장
 - 특히 소득세, 부가가치세, 양도세 등 지방세 전환
 - 기초자치단체 부활(기초의회와 시장직선제 복원)
 - 선거구 획정 및 도의회 의원 정수 결정권 보장
- 이를 위한 ‘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범도민적 특별기구’ 설치

4. 제주 4·3 지속적 진상규명

- 특별법에 ‘보상’을 ‘배상’으로 정정
 - 배상금액, 가족관계 특례조항, 유족 뜻 반영
- 추가 진상 조사
 -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 지속 및 실태조사
 -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, 연좌제 피해
-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‘제주 4.3항쟁’으로 정명
 - 미군정을 비롯한 당시 공권력의 책임규명
 - 제주도민들의 명예회복과 평화인권교육 강화